

#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新산업정책방향

주 영 준\*

## 1. 들어가며

새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 직후부터 줄곧 던진 화두는 개혁과 분배이다. 또한, 모든 정책을 ‘원칙과 신뢰’, ‘자유와 분권’, 그리고 ‘사회적 통합’이라는 민주적 가치에 기본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도 있다. 이를 통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선진 경제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당선자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목표 달성이 가능하려면 그간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해 왔던 제조업 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세계 1~6위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 산업들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문제가 남아 있고, 이들 업종을 대체하여 주력산업군으로 부상할 수 있는 미래전략산업의 발굴도 주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우리 산업들의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확충할 수 있는가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데, 성장을 통해서만 더 많은 분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성장 잠재력 확충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 2. 산업정책과 성장잠재력 확충

성장 잠재력이라 함은 성장을 결정짓는 생

산요소,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능력을 의미하는 데, 개도국의 경우는 생산요소의 절대 투입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하는 반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절대적 투입량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요소 생산성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과거 산업정책이 요소 투입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에 초점을 맞춰 왔으나, 최근에는 혁신을 통한 요소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이 선회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수준은 5% 대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결코 고정된 수치가 아니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6%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지 않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다. 미국이 좋은 사례이다. 지난 1986~1995년(10년)간 미국의 연 평균 2.8%의 저성장에 빠졌으나, 클린턴 행정부 당시 경쟁력 강화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 IT 투자확대 및 규제개혁에 나선 결과, 1996~2001년(6년)간 연 평균 3.4%의 고성장을 기록하였다. 경제성장률을 연 평균 0.6%나 끌어올린 것이다. ‘영국병’에 시달리던 영국의 경우도 1979년 대처 정부가 들어서서 규제개혁, 민영화, 노사관계 개선과 지식·혁신·생산성 향상에 주력하여 서유럽에서 가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사무관

장 활력 있는 경제로 부활하였다.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산업정책 방향은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인력, 기술 혁신, 투자, 기업가 정신 등의 성장조건 (Growth Conditions)들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 3. 신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신정부는 대선공약으로 7%의 경제성장과 매년 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였다. 이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으나, 성장잠재력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한 산업정책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주력기간산업 및 부품·소재의 세계일류 경쟁력 확보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은 이미 세계적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R&D, 디자인, 마케팅 및 핵심 부품·소재의 경쟁력은 아직도 취약하다. 이 분야를 보강한다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는 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력산업 분야의 산업정책은 무형자산 확충, 서비스화 및 IT화를 촉진하는 인프라 제공에 중점을 둘 것이다. 그리고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을 위해 2010년까지 2조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2005년까지 전자부품의 국산화율을 80%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Electro-0580」 기술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 나. IT·BT·NT 등 미래기술의 조기 산업화

IT 분야의 강점은 반도체, 전자 등 IT 제조업과 초고속통신망 등 정보화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산업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전자산업

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선취(先取)하면 디지털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Post PC, 전자소재 등 디지털 전자산업이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다. IT 제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입지, 환경, 관세 등 외국기업보다 불리한 경쟁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의 통상공세에 적극 대처하는 산업통상체제를 구축하며, 산학연 공동의 핵심기술개발에 역점을 둘 것이다.

산업의 e-비즈니스화는 우리의 정보화 인프라에 비해 많이 낙후되어 있는 분야이다.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은 한국의 e-비즈니스 수준을 세계 24위로 평가할 정도이다. 산업의 IT 활용 수준이 높아야 경제전체의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 앞으로의 IT 정책은 IT의 산업 활용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자거래율을 2002년 11.5%에서 2007년 4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e-비즈니스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의 정비를 위해 653개의 개별법에서 정한 법정서류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산업, 중소기업, 지역산업 및 무역 등 산업 전분야에 e-비즈니스 기반을 확충하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BT(바이오기술)는 IT 다음으로 차세대 경제성장을 견인할 전략기술이다. 2007년까지 선진국 기술의 80% 수준에 도달하고 조기산업화에 한발 앞서야 한다. 정부는 바이오물질, 응용기반기술, 바이오융합기술, 생체치료 기술 등 4개 분야의 핵심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2010년까지 약 2천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전국에 총 16개 바이오집적지를 조성('02~'06년 4,044억원)하여 전국적인 바이오 벨

트를 구축할 것이다.

NT(나노기술)는 21세기를 견인할 차세대 핵심기술이며 산업의 활용분야는 IT, BT를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는 나노 펌(Nano Feb) 설립으로 기초기술을 확보하고, 이와 병행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산업화 기술개발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나노 연구 및 산업화의 기초가 되는 길이·입자 등에 대한 측정기술의 표준화 연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다. 서비스산업의 병행 발전

우리 서비스산업은 고용비중은 높으나, 생산성은 매우 낮다. Wal-Mart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유통산업은 생산성이 제조업보다도 높다. 우리 유통산업을 현대화·정보화하여야 한다. 생산성이 높은 대형유통업·무점포 판매업 등 첨단 유통업체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재래시장의 리모델링을 통해 중소 유통업의 체질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아웃소싱 서비스수준 합의서”의 보급을 확대하여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부조달에서의 용역발주시 최저입찰제 방식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물류설비인증제도」 도입, 공동물류 시범사업 확대 등을 통해 기업물류의 표준화·정보화·공동화를 촉진해 나갈 것이다.

#### 라. 산업집적화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수도권 입지규제 등 지방분산을 위한 규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제 중장기적 시각에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지역산업을 발전시키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

역의 생산기능과 연구개발·기업지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산업과 지방대학의 연계를 촉진하고 산업지원기능간의 상호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식기반산업의 집적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하여 발전시키고,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지역산업균형발전 보조금」 도입하는 한편,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감면, 주택금융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지방재정 자립도(54.6%) 개선, 지방분권, 지방 물류기반 및 지방대학의 발전 등 관련 인프라가 병행하여 확충되어야 지역별 산업의 집적화가 촉진될 것이다.

## 4. 맺 음 말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글로벌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근간은 산업혁신 체제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에 있다. 노무현 당선자도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산업혁신 체제의 구축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내적 역량을 키우고, 동북아 경제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계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택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오는 2월 26일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산적한 현안 과제와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5년간의 청사진은 이미 완성된 상태이다. 새로운 출발에 앞서 우리 모두 크게 심호흡을 하고, 새로운 각오로 21세기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의 도약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